

담당부서 : 공보관

담당자 : 김유경 주무관

연락처 : 055-211-2064

경남도지사, “현장 찾아가는 도정으로 전환 필요” 강조

- 박완수 지사,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‘현장 찾는 도정으로 전환’ 언급
- “행정 서비스는 반드시 도청 중심으로 하는 것 아냐…현장 행정 서비스 필요”
- 암, 치매 등 중증질환 지원책 발굴 주문 … “중증질환자와 가족 지원에 힘써야”

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경남도청 공무원들에게 행정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는 ‘현장 중심 도정으로의 전환’을 당부했다. 아울러 암, 치매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도민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책 발굴도 주문했다.

15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 지사는 “행정 서비스가 도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”며 “각 부서별로 도내 현장에 직접 찾아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
박 지사는 이 같은 당부와 함께 경남도립미술관 소장품을 반출해 도내 각 지역에 순회 전시하는 ‘찾아가는 전시회’, 도청이 아닌 39사단에서 개최된 예비군의 날 행사 등을 예로 들며 “행정 서비스 제공이나 행사 진행이 도민들이 있는 현장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”며 도정 전반에 걸쳐 ‘도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박 지사는 또 암이나 치매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도민과 그 가족들이 겪는 수고나 불편을 덜어주는 최전선에서 경남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 박 지사는 “의료와 관련해 도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중증질환을 다루는 일일 것이라 생각한다”며 “암이나 치매 환자 중 얼마나 많은 분이 의료시설 혜택을 받고 있는지, 혹은 가족들의 돌봄을 받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, 경남도가 어떤 부분을 보완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박 지사는 제22대 총선 이후 경남도의 대응 방향도 언급했다. 박 지사는 “「남해안 관광 진흥 특별법」 등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던 경남도정 관련 법안, 주요 현안 및 정책들을 이제 새롭게 준비해 발의해야 한다”며 제22대 국회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.

박 지사는 또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이 도내 기업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“도내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챙겨달라”고 강조했다. 아울러 오는 19일 밀양에서 개막하는 제63회 경남도민체전과 관련해 경남도가 추진해 온 ‘문화예술체전’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.

아울러 산림청이 추진 중인 ‘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유림 법령 정비’와 관련해 도내 각 시군이 기획 중인 산림관광 개발계획에 대해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산림청에 건의할 것도 당부했다. 또한 도내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꾀하는 데 있어 자금이나 정보 부족을 겪는 문제에 대해 관련 시책 발굴을 주문하기도 했다.

박 지사는 또한 지난 6일 재개장한 경남마산로봇랜드와 관련, 대중교통 체계가 취약하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버스 노선 증편 검토를 지시했고, 공공심야악국 운영 및 고립·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제정과 실태조사에 대한 종합적 정책지원 수립에 속도감을 더해달라고도 당부했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공보관 김유경 주무관(055-211-206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